

보도자료		 The Media Network for Justice	 통합 · 진전 · 참여 KBS 노동조합
보도요청: 2021.3.22(월) 10:00 부터			
연락처	010-5824-0290(에디터 박한명)	주관 : 미디어연대	

미디어연대 · KBS노동조합 2021 보궐선거 「팩트체크+ 보고서」 1주차 발표 (3.22)

“KBS, MBC 등 공영방송과 TBS, 야당 후보 의혹은 증폭, 여당 후보 의혹은 사실상 은폐”

- 오세훈·박형준 의혹은 반복·부풀리기 박영선 의혹은 덮기 -

“<MBC 뉴스데스크>는 사실상 박영선의 언론캠프?”

“보수세력에 응단폭격·‘내편만 출연’ 최악의 편파방송

<스트레이트-백신과 거짓말>”

- 방송심의규정상 공정성, 객관성 등 위배 -

“KBS <뉴스9> 야권 단일화 실패 프레임 고집, 여당 1등 선거운동원 ”

“왜곡 선동의 극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야당 후보에 대한 일방적인 의혹제기, 거의 음모론 수준 -

“KBS·MBC 선동방송에 비하면 양호한 SBS”

- 상대적으로 균형감, 그러나 편파적 -

4·7 보궐선거 보도에서 KBS, MBC, SBS 등 공영방송사 메인뉴스·시사프로그램과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대표적 공영 언론사들이 이번 선거에서 최대 이슈인 야권단일화 국면에서 갈등은 최대한 증폭시키고 여당 후보의 부동산 의혹과 ‘피해호소인 논란’ 등 악재는 사실상 은폐에 가깝게 축소하는 등 편향성이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디어연대(공동대표 황우섭 조맹기)와 KBS노동조합(위원장 허성권 정책공정실장 이영풍)은 22일 지상파, 종편 등 주요 방송을 대상으로 2인의 대표와 박한명 장옥님 위원이 대표위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3월 15일(월)부터 3월 21일(일)까지 7일간을 중심으로 보도내용을 분석한 2021년 보궐선거 「팩트체크+ 1주차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같이 지적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사실상 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언론대응 캠프나 다름없었다. 오세훈-안철수 야당 후보의 단일화 과정을 현미경 보도하면서 양측 갈등을 교묘히 부추겼다. 특히 뉴스데스크 속 코너, [정참시]는 모니터 기간 세 차례 방송 모두 야권단일화 이슈만 타깃을 삼는 집요함을 보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야권 분열을 노리는 민주당 측에 유리한 보도로 보이기에 충분하다.

<뉴스데스크>는 아울러 연일 야권단일화를 이전투구형으로 보도하며 야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각인, 강화시키는 한편, 박 후보의 정책공약과 대조시켰다. 도쿄 아파트 등 박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의혹제기도 있으나 야권의 오 후보 내곡동 땅 의혹과 박 후보의 엘시티 의혹만을 집중 공격 보도했다. 아울러 LH 부동산 투기사태, 백신접종 논란 등의 이슈에서도 야권 비판은 배제하고 청와대발 받아쓰기 보도로 일관했다.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백신과 거짓말> 21일 방송은 일부 유튜버들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으면 치매에 걸린다'는 등의 잘못된 방송을 한 것을 핑계로 늦은 백신확보, 소리만 요란한 K-방역 문제 등 정부당국의 책임은 제외한 채 백신 불안감 확산 원인을 모두 보수세력 탓으로 몰아갔다. 이와 같은 방송은 공정성, 객관성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KBS <뉴스9> 또한 여당의 1등 선거운동원으로서 전혀 부족하지 않았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피해호소인' 논란을 둘러싼 비판 여론을 반영하지 않았다. 야권 단일화 실패 프레임에 맞춘 보도를 지속했고, 특히 4.7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중심 의제 서술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 비판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러한 보도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방송법 제33조에 따른 공정성 위반 소지가 있다. 특히 <'난항' 내곡지구 개발,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본격화'>, <박형준, '아파트 특혜' 거래 논란...여 "재산 다 공개하라" vs 야 "흑색 선전"> 등 기사를 통해 오 후보와 박 후보 부동산 투기 의혹을 과다하게 제기했다. 이러한 보도는 청와대, 국토부 공무원, LH, 캠코더 출신 등 여권발 투기 의혹 사건이 연일 터져나오는 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공영라디오의 편향성은 뉴스보도와 비교할 수 없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은 진행자인 김어준 씨가 객관적 근거 없이 야당 후보들이 크게 앞선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문제 삼으며 조사가 왜곡됐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야권 후보에 대해 일방적 의혹을 제기하고 몰아가는 흐름은 마찬가지로였다. 예컨대 박

후보 엘시티 관련 의혹에선 101층 아파트의 17~18층을 자의적으로 로열층으로 규정 짓고 막연한 근거로 박 후보 아파트 구입에 비리가 개입됐을 것이라는 추측을 부각시켰다. 이와 같은 보도는 전형적인 선동보도에 해당된다.

또 이 프로그램은 박 전 시장 피해자의 2차 가해가 우려될 정도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비판했고, 전문가 인터뷰조차 여론 측 인사들만 집중 섭외하는 등 극단적인 편파성을 보였다.

보궐선거에서 여당 편들기가 대담하고 불공정하게 선동적 행태로 자주 나타나는 공영 라디오 일부 프로그램은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킬 수 있어 사실상 범죄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반면 SBS <8시뉴스>는 상대적으로 팩트와 정보전달 위주로 보도해 편파성이 덜했다. 그러나 박 후보의 '서울시민 1인당 10만원 위로금 지급' 등 일부 보도는 대표행위와 관련선거 측면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점을 지적하지 않는 모습도 보였다.

(아래 붙임 : 팩트체크+ 1주차 보고서)

2021 보궐선거 「팩트체크+ 1주차 보고서」

차 례

I. 박영선 후보 '언론캠프'로 변신한 MBC <뉴스데스크>

- 뉴스 속 '정참시' 야권분열조장·이전투구 프레임

II. '문-방역' 홍보, 편파의 극치 <스트레이트>-백신과 거짓말

- AZ백신우려·불안감 확산, 모조리 '보수탓'

III. 여당 '1등 선거운동원' KBS <뉴스9>

- 야권단일화, '실패 프레임'에 맞춰라

IV. 왜곡선동과 음모론의 온상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V. 대담한 공영 라디오, 권력의 나팔수

-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TBS <김어준 뉴스공장>

VI. 이념과 코드를 배격한 SBS

- 그나마 상태 양호한 정보전달 형 보도

I. MBC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

● 4·7보궐선거 관련 MBC <뉴스데스크> 보도 특징은 한마디로 ‘야권분열’은 키우고 ‘여당홍보’를 강조하는 행태를 보였다. 철저하게 민주당 소속 후보 입장을 반영한 논조, 특히 MBC 출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옹호하고 유리하게 보도하는 일관된 편파보도 흐름을 보였다. 한주(3월 15일~21일) 보궐 선거 관련 보도에서 시종일관 지조있게 여당 후보 관련해서는 의혹·비판은 축소 정책은 홍보, 야당 후보 관련해선 분열상(이전투구 이미지 각인 효과 노림수)과 의혹은 부각시키는 보도행태를 보였다.

● <뉴스데스크> 속 [정참시]는 일주일간 야권분열상(이전투구형)만 집중 부각시키는 ‘야권 때리기’ 전용코너로 활용됐다.

● 개별 리포트 모니터 결과 불공정한 보도 사례가 여럿 발견됐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편파적인 보도가 더 문제였다. 여권에 우호적이고 야권에 불리한 기사 구성이 많았다.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4조 정치적 중립, 제5조 공정성, 제6조 형평성, 제11조 제작기술상의 균형 등의 심의기준 위반 소지가 있는 리포트가 다수였다.

●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뉴스들은 일부에서 부작용 사례가 발생해 논란인 아스트라제네카(AZ) 의혹은 감추거나 의혹을 해소하는 뉴스가 아닌 ‘안전성에 문제 없다’는 방역당국 입장만을 강조 보도해 시청자들이 실상을 제대로 알기 어려웠다. 방역당국의 실패나 백신 불안감은 정부여당에 불리한 이슈다. MBC의 이러한 보도태도는 보궐선거 정국에서 백신논란이 정부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1. ‘야권분열’ 즐기는 <MBC 뉴스데스크>

▶ <[정참시] "살벌한 협상"..."상왕 논란에 야권분열 책임론까지"> (3.16)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20536_34936.html

○ 야권단일화 협상 보도에서 MBC는 시종일관 야권분열을 조장하는 보도를 유지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대표 간 오간 거친 발언들을 상세히 전달했다.

▶ <단일화 여론조사 일단 '불발'...야권 단일화 난항> (3.17)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21448_34936.html

▶ [정참시] 상왕, 상황제, X맨까지...단일화는 어떻게? (3.17)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21453_34936.html

○ 뉴스속 코너 '정치적 참견 시점(정참시)'를 통해 계속해서 야권분열상을 상세히 보도. 전형적인 '야권은 분열 여권은 정책홍보'형 프레임에 맞춘 보도.

▶ <'아름다운 단일화' 불발?..."정신 이상" 비방까지> (3.18)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22380_34936.html

○ 야권분열상을 상세히 보도, 시청자들에게 이전투구로 인식될 가능성이 큰 보도였다. 반면 양 측의 타협 가능성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소위 이간계형 보도.

▶ [정참시] 이제는 '정신 이상자'...왜 이런 막말까지? (3.18)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22385_34936.html

○ 연일 계속되는 야권분열 보도는 시청자들에게 이전투구, 막장뉴스로 인식하도록 만든다. 야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각인시키는 효과.

2. '어용본색'-야당은 공격, 여당(박영선)은 띄우기

▶ 민주당의 승부수?..."재보선 후보자 포함 전수조사하자" (3.15)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19407_34936.html

○ 이날 보도 중 야권 관련 바로 앞선 리포트에서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야권 분열상을 상세히 보도하고 이어진 해당 리포트에선 박영선 후보의 입장을 그대로 전하거나, 오세훈-안철수 후보와 달리 LH 사태와 관련하여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전직원에 대한 부동산 보유 실태조사와, 부동산 거래 사전 신고제 시행, 그리고 부동산감독청 설치를 선제적으로 공약하면서, 야당 후보들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라며 박 후보의 공약을 상세히 전달했다. 정치인들의 투기 의혹 조사에 대해선 여권 측 주장만 부각시키고, 국민의힘은 "뒤늦게 전수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등의 표현으로 짧게 언급하며 마치 조사에 소극적인 것처럼 오인케 했다. (선거방송심의규정 제5조(공정성)제1항, 제12조(사실 보도)제1항 위반 소지 다분)

▶ '4대강 반대' 사찰 문건 공개..."박형준 요청 확인" (3.15)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19431_34936.html

○ 선거 개입 의도로 의심되는 특정 성향의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의혹을 보도. 박 후보의 반론을 싣더라도 야당 후보에 무조건 불리한 보도. MBC는 맞상대인 김영춘 후보 관련 의혹이나 비판 보도를 하지 않았다.

▶ 오세훈 땅으로 반전 시도…"내곡동 땅 셀프 보상" (3.16)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20516_34936.html

(박영선 후보 유리, 오세훈 후보를 직접 공격하는 보도)

▶ 박원순 피해자 "고인 추모 움직임 속 설 자리 없어" (3.17)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21414_34936.html

○ MBC는 이날 보도에서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주장과 입장을 드라이하게 전달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박영선 후보 등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주장했고, 국민의힘, 국민의당, 정의당도 민주당의 '책임있게 응답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지만 MBC는 야당 측 비판 목소리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 같은 날 이 이슈와 관련하여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측 (與, 9시간만에 "사죄"...野 "'피해호소인 3인방' 캠프 참여가 2차 가해"-TV조선)의 입장과 여권의 미온대응 (박원순 피해자 회견 9시간 반 만에 與 "진심 사죄", 朴 피해자 호소 "모른다"던 여당, 9시간 지나서야 공식 사과-<TV조선 9시뉴스>)을 별도의 꼭지로 비판적으로 보도한 타 언론사의 보도 태도와도 확연히 달랐다. 심지어 한 꼭지에서 피해자의 입장과 민주당의 사과 입장을 같이 전달한 SBS(처음이자 마지막 토로..."진정성 없는 사과")보다도 훨씬 편파적인 구성을 선보였다.

○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비롯된 것임을 볼 때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박 전 시장 피해자의 공개 기자회견은 악재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야권분열은 부각, 여권후보는 홍보' 프레임을 고집하는 MBC는 피해자의 기자회견을 보도하긴 했지만, 사과에 미온적인 여권에 대해선 일절 언급이나 지적하지 않는 극도의 편향성을 보였다.

▶ 여권은 이변 없이 박영선…임대로 지원 공약 발표 (3.17)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21447_34936.html

(박영선·김진애 여권 단일화 결과를 전하는 성격이지만, 사실상 박영선 후보 정책 홍보 성격의 리포트)



○ 이러한 편파성은 같은 날 범여 단일후보 경선 결과에 대한 TV조선 보도와 비교하면 민주당 편향 MBC 보도의 편파성이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TV조선 9시뉴스 <'범여' 단일후보에 박영선...LH궤 약재에 임대료 지원책 발표> [앵커]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를 꺾고 범여권의 서울시장 단일후보로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썰렁했습니다. LH 투기의혹의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 기자회견까지 이어서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 '셀프 보상' 의혹에 해명도 논란...'오세훈 땅' 쟁점은? (3.17)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21449_34936.html

○ 리포트 중 일부 발췌 :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지난 9일)]

"노무현 정부 국토부에 의해서, 2006년 3월달에 그 땅이 국민임대주택단지, 후보지로 지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 해명은 일주일만에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확인 결과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건 2006년이 아닌 2009년, 오 후보의 시장 재임 시절이자 이명박정부 때였던 겁니다. 오 후보는 혼선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협의가 시작된 건 노무현정부 때였다고, 자신이 개입해서 개발계획을 바꾼 게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 전날에 이어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을 연속, 집중보도 했다. 민주당 박영선(서울)·김영춘(부산) 후보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제기는 없지만 오세훈 후보는 이를 연속 공격적으로 보도했다.

▶ 후보 등록 박영선...'박원순' 사과하고 오세훈 '조준' (3.18)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22381_34936.html

○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 측에 대한 박영선 후보와 민주당 측 사과를 집중 보도했다. “박 후보와 당이 거듭 사과하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등의 서술로 박 후보 측 사과의 진정성을 부각시키며 보궐선거 국면에서 악재로 떠오른 이슈가 확대되는 것을 경계한 보도였다. 반면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는 처갓집 내곡동 땅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해당 리포트 방송 내내 왼쪽 상단 화면에는 “‘박원순’ 거듭사과”라는 문구를 계속 띄웠다. 그럼으로써 MBC는 박 후보 측이 ‘피해호소인’ 논란의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다했다는 점을 은연중 부각함과 동시에 오 후보의 투기의혹을 시청자에게 각인시키려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 그러나 이날 타 언론사들은 (“오세훈 MB키즈”·“박영선 도쿄시장”…여야 네거티브 공방-〈TV조선 9시뉴스〉) (‘피해호소인 논란’ 남인순·진선미·고민정 캠프직 사퇴-〈TV조선 9시뉴스〉) 등으로 여야공방으로 보도하고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관련은 별도의 꼭지로 보도하거나, (오세훈 ‘내곡동 땅’ 쟁점 부상…“셀프 보상” vs “국장 전결”-〈SBS 8시뉴스〉)와 같이 쟁점인 오 후보 내곡동 땅을 별도의 꼭지로 다루어 민주당 주장과 오 후보 측, 그리고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서울시 담당 주택국장을 취재하여 객관성, 공정성을 보완해 보도했다.

○ 해당 리포트 역시 고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과 ‘피해호소인 2차 가해’ 논란의 피해자에 대한 민주당 박영선 후보 측의 사과,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을 함께 다루므로써, 박 후보를 ‘사과하는 겸손하고 긍정적인 후보’로 오 후보를 ‘의혹이 많은 부정적인 후보’라는 프레임으로 보도를 이어갔다.

▶ 박영선 “전 시민 10만 원”…‘엘시티 의혹’도 맹공 (3.19)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23624_34936.html

○ 이번 보궐선거 관련한 MBC 보도 특이점은 박영선 후보의 정책공약 홍보 및 해명·사과(피해호소인 논란 등)와 함께 야권 후보에 대한 비판·의혹제기를 한 꼭지 리포트에 모두 담아 전달하는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다. 박 후보의 장점은 최대한 부각시키고 의혹과 비난은 잠재우면서 동시에 타깃을 야권 후보에게로 돌리는 형태를 띤다. 일종의 물타기형 보도다. MBC의 ‘박영선 특별우대’ 보도태도는 야권과도 불균형을 이룰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같은 당 소속의 김영춘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와도 차별적인 태도를 보인다. 요컨대 MBC는 박영선 선전기관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 야권 단일화 규칙 가닥…박영선 ‘지역 공약’ 발표 (3.20)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24306_34936.html

○ 오세훈-안철수 후보 야권단일화 합의 소식을 전달했다. 그러나 합의 소식을 전달하면서도 여론조사에 대한 양 측이 미세한 이견이 있다며 이를 부각시키고 리포트 후반부에는 박 후보의 정책공약을 홍보했다. 뉴스 한 꼭지에 야권분열 조장과 박 후보 정책홍보를 끼워 넣는 구성의 이런 리포트는 이번 보궐선거 보도에서 MBC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특징이다. 같은 날 관련한 SBS 보도의 구성과 비교하면 극명하게 나타난다.



※ 사진설명 : 위는 MBC, 아래는 SBS 보도화면 캡처. MBC는 단일화 합의에서 오-안의 미세한 차이점이 있다고 부각시킨 반면 SBS는 야권단일화 성사와 합의결론을 강조하는 화면구성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MBC는 야권분열형, SBS는 야권통합형으로 분류가능.

○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1조(제작기술상의 균형) (선거에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은 음향과 음성, 촬영, 화면구성, 조명 등의 기술적 측면에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하여 가능한 한 동등한 조건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위반 소지가 있다.

3. 문재인 대통령(정부) 책임론 은폐 (LH 사태, 코로나19 백신접종)

▶ "큰 심려 끼쳐 송구"...문 대통령, 'LH 투기 의혹' 사과 (3.16)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20505_34936.html

○ 앵커 : LH 직원들 투기 의혹이 제기된지 2주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 했습니다. 부동산 적폐를 청산 하겠다면서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끊어버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략) 문 대통령의 사과 시점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사태 수습이 먼저이기 때문에 강도 높은 조사와 제도 마련 등을 먼저 지시한 뒤, 재발방지를 국민들께 다짐하는 의미로 사과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라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설명

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등 부동산 적폐 청산을 위한 국회 협조를 위해선 '대통령의 사과'까지 정쟁화되는 정치권 상황을 조기에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현실론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전형적인 청와대발 받아쓰기 보도였다. LH 투기사태 관련 대통령 사과의 진정성을 적극 부각시킨 반면, 야권의 비판은 일체 보도하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당일 야당의 비판과 주장을 함께 전한 (文, LH사태 2주만에 사과 "갈 길 멀어"...野 "또 前 정부 탓"-<TV조선 9시뉴스>) (문 대통령 "심려 끼쳐 송구"...'LH 특검' 급물살-<SBS 8시뉴스>)과 비교해 보면 MBC의 편파성이 극명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땡문뉴스' 전형이라 불려도 손색없는 리포트.

○ 다른 언론사들이 LH 사태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사과를 야당의 비판, 주장과 함께 전한 반면 MBC는 이날 첫 리포트로 <LH 특검·국정조사 원칙적 합의...의원 전수 조사도>란 제목으로 LH 사태를 여야 공방 혹은 여야 대립의 구도의 프레임으로 보도했다. 이러한 보도는 LH 사태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덜어내는 효과를 낳는다. 정치적 술수가 개입한 보도라고 할 수 있다.

▶ AZ 접종 20대도 혈전 신고...“연관성 확인 안 돼” (3.18)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22365_34936.html

○ 리포트 중 일부 발췌 :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혈전이 생겼다는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이번엔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인 20대 남성인데, 현재 백신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가 진행 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일부 유럽 국가들이 혈전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중단한 사례가 있지만, 백신과의 관련성이 확인된 사례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 코로나19 백신접종 진행상황은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된다. 아스트라제네카(AZ)접종 후 혈전이 생겼다는 신고가 추가 발생했고,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인 20대 남성의 사례가 발견됐다고 보도. 현재 백신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 백신접종과 혈전 발생 사이 연관성에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MBC는 ‘연관성이 없다’는 방역당국 입장을 그대로 받아쓰기 보도했다. 이러한 보도는 다른 언론사들이 2꼭지 이상 할애하며 집중 보도한 것과는 상반된 보도태도다. (AZ 백신 맞은 20대 남성도 혈전증...“입원 치료 중”-<TV조선 9시뉴스>) ('혈전 논란'에...일부 요양병원 AZ백신 접종 동의율 '뚝'-<TV조선 9시뉴스>) (백신 맞은 20대도 혈전 신고..."인과관계 조사"-<SBS 8시뉴스>) (AZ 백신 맞은 20대의 '혈전 신고', 어떻게 봐야 할까?-SBS <8시뉴스>) MBC는 백신접종과 관련하여 정부당국의 입장을 적극 반영한

맞춤형 보도로 보궐선거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파장이 최대한 퍼지지 않도록 축소 보도한 셈이다.

▶ 유럽에서 안전 확인…"AZ 접종 중단할 이유 없다" (3.19)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23632_34936.html

○ MBC는 코로나19 관련 보도에서도 계속해서 백신 안정성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 이날 백신 관련 <TV조선 9시뉴스>는 (<정부, 유럽 '혈전증과 무관' 결론에 AZ 백신 접종 독려>, <AZ 접종 강화군 공무원 100여명중 70여명 이상 반응>)과 <SBS 8시 뉴스>는 (<유럽 "AZ 이익이 혈전 위험보다 커"…접종 재개>) 꼭지로 보도했다. MBC가 백신 안정성을 강조한 것과 다르게 <TV조선>은 부작용과 염려를, <SBS>는 부작용 있지만 상대적으로 접종 이익이 크다는 점을 전달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현황은 정부나 정파의 유불리보다 국민 건강 차원에서 객관적 보도가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SBS가 상대적으로 공정하게, MBC는 완전히 정권의 홍보기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화이자 '2차 접종' 시작…의료 인력 '3백 명' 완료 (3.20)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24297_34936.html

▶ 두 번째 접종 현장…99%는 '1병에 7명' 주사 (3.20)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24298_34936.html

○ 김연재/국립중앙의료원 감염관리 팀장 화상출연했다. '1병에 7명분 주사 우려'에도 '문제없다, 백신 다 접종해라' 등 정부와 방역당국 입장만을 그대로 보도했다.

○ 이날 다른 언론사에서도 (화이자 2차 접종 시작…"다음 달 초 백신 효과"-SBS 8시 뉴스)(TV조선 7시뉴스-<화이자 '2차 접종' 시작…당국 "국내 혈전증 20대, EMA '주의 사례' 해당">)처럼 1차 접종자 첫 사례 주인공(국립중앙의료원 미화원)이 등장해 2차 접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출연자들은 MBC와 거의 비슷했지만 백신효과 전망과, AZ 백신 접종 후 뇌혈전이 발견된 20대 환자에 대한 원인 유발인자 검사 진행 중인 상황 등을 다른 방송이 전달한 것과 달리 MBC 보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 '위증 교사' 결국 불기소…의혹 밝힐 기회 사라져 (3.20)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24307_34936.html

○ 사기꾼 재소자의 말만 믿고 수사지휘권 발동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한명숙 전 총

리 금품수수 유죄 사건에서 명백한 물증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라는 명백한 팩트는 무시한 보도였다. 이 이슈와 관련하여 다른 언론사 보도(<압도적 불기소 결론…머쓱해진 수사지휘권 발동-SBS 8시뉴스>, <수사지휘권 발동 무색해진 박범계…'감찰·인사 카드' 꺼낼 듯>, <대검 확대회의, '한명숙 모해위증' 10대2 불기소 결론>, <'한명숙 사건' 투표방식 놓고도 논쟁…표결 과정서 고성까지> <[포커스] 여권의 끊이지 않는 '한명숙 구하기'> 이상 <TV조선 7시뉴스>와 비교해 봐도 여권이 왜 한명숙 구하기에 나섰는지, 명백한 물증을 부인하는 여권의 억지 등 비판정신은 일체 없었다. 정확히 친문 권력의 프레임을 따른 보도 모범사례.

- ▶ [정참시] "살벌한 협상"…"상왕 논란에 야권분열 책임론까지" (3.16)
- ▶ 단일화 여론조사 일단 '불발'…야권 단일화 난항 (3.17)
- ▶ [정참시] 상왕, 상황제, X맨까지…단일화는 어떻게? (3.17)
- ▶ '아름다운 단일화' 불발?…"정신 이상" 비방까지 (3.18)
- ▶ [정참시] 이제는 '정신 이상자'…왜 이런 막말까지? (3.18)

- ▶ 민주당의 승부수?…"재보선 후보자 포함 전수조사하자" (3.15)
- ▶ '4대강 반대' 사찰 문건 공개…"박형준 요청 확인" (3.15)
- ▶ 오세훈 땅으로 반전 시도…"내곡동 땅 셀프 보상" (3.16)
- ▶ 박원순 피해자 "고인 추모 움직임 속 설 자리 없어" (3.17)
- ▶ 여권은 이변 없이 박영선…임대로 지원 공약 발표 (3.17)
- ▶ '셀프 보상' 의혹에 해명도 논란…"오세훈 땅' 쟁점은? (3.17)
- ▶ 후보 등록 박영선…"박원순' 사과하고 오세훈 '조준' (3.18)
- ▶ 박영선 "전 시민 10만 원"…"엘시티 의혹'도 맹공 (3.19)
- ▶ 야권 단일화 규칙 가닥…박영선 '지역 공약' 발표 (3.20)
- ▶ 이르면 23일 단일 후보 결정…박영선 "일할 사람 뽑자" (3.21)

- ▶ "큰 심려 끼쳐 송구"…문 대통령, 'LH 투기 의혹' 사과 (03.16)
- ▶ AZ 접종 20대도 혈전 신고…"연관성 확인 안 돼" (3.18)
- ▶ 유럽에서 안전 확인…"AZ 접종 중단할 이유 없다" (3.19)
- ▶ 화이자 '2차 접종' 시작…의료 인력 '3백 명' 완료 (3.20)
- ▶ 두 번째 접종 현장…99%는 '1병에 7명' 주사 (3.20)
- ▶ "안전성 문제없다"…65세 이상 접종 예정대로 (3.21)

● 참고 :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 제4조(정치적 중립) ①방송은 선거의 후보자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②방송은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의 주의·주장 또는 이익을

지지·대변하거나 옹호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공정성) ②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의 배열과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6조(형평성) ②방송은 선거방송에서 후보자와 정당에 대하여 실질적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평한 관심과 처우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1조(제작기술상의 균형) 선거에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은 음향과 음성, 촬영, 화면구성, 조명 등의 기술적 측면에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하여 가능한 한 동등한 조건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Ⅱ. '문-방역' 홍보, 편파의 극치 <MBC 스트레이트>-백신과 거짓말

○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으면 치매에 걸린다' '백신을 맞으면 빌게이츠의 노예가 된다' 등 근거 없는 허위, 음모론 방송을 하는 유튜브 채널을 몇 개 소개하면서 거기에 백신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김문수TV 등 우파 유튜브 채널을 소개했다. 이어 국민의힘, 대한의협과 최대집 회장,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이 백신 음모론을 퍼트려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스토리, 맥락으로 전개됐다.

○ 무책임한 백신 정치의 사례로 "아스트라제네카 1번 접종을 대통령부터 하시라"는 유승민 전 의원 "대통령이 못 맞을 백신이라면 국민에게도 맞이면 안 됩니다"는 하태경 의원, "정부가 국민들에게 접종을 권할 것이라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부터 먼저 접종해서 국민들에게 백신 불안증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주호영 원내대표 등을 차례로 소개했다.

○ AZ 등 백신 음모론, 불신론을 반박(비판)하는 인터뷰이로는 이재갑 교수(청와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의 고려대 의대 동문),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김준일 뉴스톱 대표, 정미정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 등이 출연했다. 이들은 대부분 문재인 정권 들어 미디어에 자주 출연하는, 문정권과 여당의 입장을 잘 대변하는 친여 성향의 인물들로 분류된다.

○ 아스트라제네카 우려는 유튜버들의 음모론이나 정치권, 정확히는 야당이 퍼트린 것이 아니다. 유럽 국가에서 혈전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등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여

유럽 국가들이 잇달아 중단한 것이다. 그러나 스트레이트는 이 백신접종 중단 문제를 EU 국가 내 정치적 갈등이 원인인 것처럼 몰아갔다. 실제 부작용 사례는 예시하지 않았다.

○ 백신불안 조성 책임은 허위 왜곡된 정보와 음모론을 주장하는 일부 유튜버와 일부 정치, 종교계 등에게도 있다. 그러나 궁극적인 책임은 화이자, 모더나 등 발 빠르게 백신확보에 나섰던 일본, 미국 등과 달리 뒤늦게 백신확보에 나섰다가 OECD 국가 중 백신 접종이 가장 늦고, 집합모임과 거리두기 등 비과학적인 정치방역 속에 K-방역 홍보에만 열 올렸던 정부, 무조건 자기들 말만 믿으라는 문정권과 방역당국에게도 책임이 있다. 스트레이트는 이러한 부분은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완전히 정권 입장에서 내러티브를 짜 모든 책임이 마치 보수 정치인, 보수 유튜버, 보수 기독교, 보수적 학자, 보수언론, 정권의 방침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의학계에 있는 것처럼 몰아간 방송이다.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②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반 소지 다분하다.

Ⅲ. 여당 ‘1등 선거운동원’ KBS <뉴스9>

1. ‘피해호소인 논란’ 보궐선거 원인 핵심 이슈를 누락한 KBS <뉴스9>

▶ 고민정,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에 “머리숙여 사과”…캠프 대변인 사퇴 (3.18)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42201>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고 있던 고민정 의원이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피해자의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했던 데 책임을 지고 대변인직에서 사퇴했습니다(계현우 기자).”

▶ 고민정 이어 진선미, 남인순도 박영선 선대위 직책 내려놔 (3.18)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42418>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공동선거본부장인 진선미 의원과 고민정

대변인이 오늘(18일) 선대위 직책을 내려놓은 데 이어 남인순 의원도 선대위 공동선거본부장에서 물러났습니다. 남인순 의원은 오늘 저녁 안규백 상임선대위원장에게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고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측은 밝혔습니다. 남인순 의원은 “피해자에게 고통을 드린 데 대해 깊이 사과하고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팩트체크 플러스 : 4·7 보궐선거는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으로 국고 800억 원을 들여 치르는 선거이다. 그 원인이 되는 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피해여성이 18일 피해 호소를 하였고, 그 여파로 민주당 대변인과 공동선거본부장이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이날 최고의 사건이었다. KBS는 이 으뜸 뉴스를 부각시키지 않았다. 이로 인해 KBS는 국내 중심, 국민의 채널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

○ 관련 선거 방송심의 규정 : <공직선거법>에 의한 33조-방송 사실보도를 유지하며, 선거방송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하는 등으로 왜곡하여 보도해서는 안 된다.

2.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실패 프레임에 맞춘 보도

▶ “安되면 野분열” vs “충격적”...날선 신경전 속 ‘TV토론 1회 합의’ (3.15)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39458>

▶ 오세훈-안철수 ‘후보 등록전 단일화’는 불발...협상은 재개됐지만 (3.18)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42439>

○ “오세훈, 안철수 두 서울시장 후보의 단일화, 후보 등록 시한인 내일(19일)까지가 목표였는데 일단 무산됐습니다. 양측은 각자 후보 등록을 한 뒤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날 선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경쟁력과 적합도를 두 개 여론조사기관이 각각 조사한 뒤 50%씩 반영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조사 방식이 걸림돌이었습니다..그러나 의지와는 별개로, 양측의 신경전은 이미 선을 넘었다..이런 상황에 대해 야권의 전·현직 중진들은 김종인 위원장이 단일화의 걸림돌이라며 독설을 쏟아냈습니다.

▶ 오세훈-안철수 ‘후보 등록전 단일화’는 불발...협상은 재개됐지만 (3.18)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42439>

○ “오세훈, 안철수 두 서울시장 후보의 단일화, 후보 등록 시한인 내일(19일)까지가 목표였는데 일단 무산됐습니다. 양측은 각자 후보 등록을 한 뒤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날 선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가닥…박영선 강북권 공약 (3.20)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43678>

○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단일화 방식을 놓고 양보 경쟁을 벌이면서 정치를 희화화한다는 지적까지 나왔죠. 두 후보가 휴대전화 100%, 경쟁력과 적합도 조사로 일단 가닥을 잡았습니다."

○ 팩트체크 플러스 : 민주당 중심으로 의제를 서술하니, 국민의힘은 가능하면 비판을 강화하는 프레임이 계속되었다. 또한 이 보도는 경마식 보도유형으로 결과에만 초점이 있었다. 민주당에 비해 국민의당은 당이 색깔이 다른 쪽과 단일화를 하는 것이다. 진통이 예상되는 일이었다. 그 진통을 진통으로 묘사하지 않고 억지, 갈등 등 부정적 이미지로 서술했다. 더 큰 문제는 기자가 결론을 먼저 내어 놓고, 사건을 보도하였다. 그 결론은 단일화가 깨진다는 쪽으로 몰고 갔다. 사실에 의견 개진을 지나치게 강조했다. 그런데 결과는 단일화를 최종 확인했다. KBS의 신뢰는 추락하는 순간이었다. 공영방송은 이념과 코드에 집중하기보다, 의견 기사를 과도하게 개입할 필요가 없다.

○ 관련 선거방송 심의 규정 :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방송법> 제33조에 따른, 공정성, 공공성 문제-방송은 사실보도를 유지하며, 선거방송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하는 등으로 왜곡하여 보도해서는 안 된다. 방송은 선거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형평성, 객관성을 유지하고 후보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3. 기획기사 형식 현장중심 보도로 후보자를 대조

▶ ‘공통 공약’ 재개발·재건축…수혜자는? (3.18)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42454>

○ "KBS가 대표적인 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역의 소유주 현황과 소유주 거주 비율 등을 분석해봤습니다...서울의 대표적 재건축 예정 단지로 꼽히는 상계 주공 5단지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분석해 보니, 소유주의 실거주율은 12.5%..재건축 승인이 나면서 매매가는 3.3㎡ 당 6천5백만 원까지 치솟았는데, 세입자들은 이주 대책 세우기 바쁩니다...서울 강남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은마아파트도 세입자 거주율이 70%에 육박합니다. 두 아파트 단지 소유주의 주민등록 주소지도 분석했습니다..[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 "가장 중요한 영역이 되어야 할 것은 사실은 임대주택 그리고 세입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세입자들이 많이 사는 도시니까 이런 부분인데 (후보들의) 고민이 상대적으로 부족한....재개발 상황은 어떨까...토지소유권을 갖고 실제 거주하던 원주민의 단 17%만이 분양 신청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원주민의 40%가 4억 이하의 보상비를 받았는데 7억 원 넘는 분양가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반면, 실제 살지는 않았지만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이 55%였습니다.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고밀 개발, 내 집 한 채를 바라는 무주택자와 세입자들에게는 그다지 와 닿지 않는 공약입니다.”

○ 팩트 체크 플러스 : 이 기사는 KBS가 지향해야할 좋은 기사이다. 사건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한발 앞서 기획정신으로 후보자를 평가한다. 이런 기사 유형은 정당 후보자와 관계없이 공정한 검증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런 공약의 실천에 담당 기사는 후보자와 연결을 시키지 않았다. KBS <뉴스9>은 앞으로 이런 유형으로 독자적 뉴스 개발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 관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 위원회는 방송매체와 방송채널별 창의성,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제5조 ①항)

4. ‘부동산 투기의혹’ 여권엔 무관심, 야당엔 현미경, <뉴스9>의 선택적 관심

▶ ‘난항’ 내곡지구 개발,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본격화’ (3.16)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40478>

○ “오 후보는 그러면서 본인이 사업 추진에 관여하지 않았고 당시는 해당 토지의 존재도 몰랐다는 입장을 추가로 내놨는데요.”

▶ ‘전결’ 주택국장 “내곡지구 개발 오세훈에 보고 없이 추진” (3.19)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43325>

○ “KBS가 확인한 오세훈 후보가 2006년 7월 서울시장으로 취임할 당시 서울시 전결사무처리규칙..택지개발과 관련해 개발예정지구 지정 방침은 시장 결재, 예정지구의 경미한 변경 등은 실국장 전결로 돼 있습니다.”

▶ 박형준, ‘아파트 특혜’ 거래 논란...여 “재산 다 공개하라” vs 야 “흑색 선전” (3.19)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43326>

○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엘시티 특혜 거래 의혹이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다. 민주

당 측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보유한 엘시티 아파트 2채에 대해 재산 내역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정상 거래였다고 해명하고 흑색선전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팩트체크 플러스 : 사회는 청와대, 국토부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캠코더 출신, 재개발 조합 등이 합작해서 '비밀정보'를 바탕으로 투기에 가담한 것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KBS 뉴스는 야당 오세훈 후보, 박형준 등 국민의힘 후보의 아파트 투기에 대한 의혹을 과다하게 제기했다. 야당 후보의 비리를 집중 조망한 것이다. 사회분위기는 KBS 보도와 전혀 다르다. 중앙일보 한영혜 기자(3.20), <'대국민 사기극, 해체하라' 상여에 장송곡 올린 LH본사 앞>. "주말인 20일 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정문에서는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규탄하는 집회와 차량 시위가 잇따랐다."

○ 관련 선거 방송심의 규정 : 공직선거법에 의한 33조-방송 사실보도를 유지하며, 선거방송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 하는 등으로 왜곡하여 보도해서는 안 된다.

IV. 왜곡 선동과 음모론의 온상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1. 왜곡·선동의 극치 (2021.3.15. 07:05-08:55)

▶ '뉴스브리핑' 코너 : 국민의힘 광상도 의원이 제기한 '오거돈 일가 가덕도 인근 8만평 보유' 언론 보도에 대해 "(김어준)제목 장사거든요. 50년 전에 매입한 땅입니다", "(김어준)부동산에 분노한 국민들에게 제목을 던져주는 것, 언론하고 포털이 제 정신이 아니라고 보는데", "(김어준)50년 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 그 자체로 기각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포털에서 열심히 뿌리는 것 보니 선거가 오긴 왔는데..." 등

▶ '뉴스브리핑' 코너: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안철수 후보와의 양자 가상대결에서 모두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난 한 여론조사(에스티아이 실시)에 대해, "(류밀희)표본 추출에서 60대 이상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김어준)20%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들여다보면 샘플에 문제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문항을 물을 때도 몇 번 단계를 거쳐서, 바이어스가 걸린다고 하죠."

▶ '그것마저 알려주마' 코너: "(김어준) 선거 때가 되면 기술 들어가는 여론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야 후보가 20% 가까이 나는데", "(이강윤)LH 사태라고 해도 나오기 힘든 수

치구요” 등.

○ 팩트체크 플러스

- ‘뉴스브리핑’에선 일가가 가덕도 인근에 땅을 보유한 오거돈 전 시장이 신공항을 공약했고, 시장 재임 중 실제 추진했다는 것은 생략한 채, 50년 전 매입한 땅이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언론이 선거를 앞두고 부풀리고 있다며 오거돈 측을 편드는 발언을 했다.

- ‘그것마저 알려주마’에선 객관적 근거 없이 야당 후보들이 크게 앞선 특정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문제 삼으며 조사가 왜곡됐다는 식의 주장(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확인 결과, 현재까지 해당 여론조사에서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함)을 했다.

○ 관련 선거 방송심의 규정

선거방송심의규정 제5조(공정성)제1항, 제8조(객관성)제1항,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제2항 위반

2. 야당 후보에 대한 일방적 의혹 제기 (2021.3.18. 07:05-08:55)

1) 방송내용

▶ 오프닝과 뉴스브리핑 : 박형준 후보의 엘시티 아파트에 대해 진행자 김어준은 “로열층의 애초 주인들은 누구였길래, 1년 후면 20억의 시세차익을 얻을 부동산을 오히려 3~4억씩 깎아주며 같은 시기에 박형준 후보의 가족에게 넘겼는가”, “이상한 것은 매우 특이한 우연이 연속으로 겹친다. 그런 고가의 아파트 아래 위 17~18층 로열층이 동시에 나오는 건 매우 드물죠”, “부산 지역 부동산 규제가 해제됐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것은 명확했고, 동시에 그런 사람 둘이 나타났다는 거죠. 시세차익 20억을 포기한 사람인 거죠. 프리미엄을 깎아주면서” 등

▶ 뉴스브리핑 : 박원순 전 시장 피해자 기자회견에 대해 진행자 김어준은 “핵심은 민주당 찍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본인 얘기와 어제 얘기는 전혀 다른 차원이 되는 거죠”, “선거 기간에 적극적인 정치행위가 되는 거죠. 이제 그걸 비판한다고 해서 2차 가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굳이 나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등

▶ ‘서양신’ 코너 : “(신장식)노무현 정부가 사실상 추진했던 사업이다. 이것도 거짓말이었죠”라며 단정하고, “(서기호)명백하게 물적 증거가 있고, 본인이 3월 16일 페이스북에 자백했기 때문에 빼박. 허위사실 공표죄가 명백하게 입증됐습니다”, “(서기호)두 가지는 확실

하게 유죄가 인정되는 부분” 등,

○ 팩트체크 플러스

- 오프닝과 뉴스브리핑, 코너 등 방송 내내 4·7보선 야당 후보와 관련된 아이টে에 장시간 할애하였는데, 박 후보의 엘시티 관련 의혹에선 101층 아파트의 17~18층을 로열층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로열층’을 강조하고, 20억 원의 시세차익이라는 엄청난 금액은 정확한 것이라기보다는 추측을 언급한 것으로 박 후보의 아파트 구입에 비리가 개입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부각시켰다.

- 박 전 시장 피해자 기자간담회 관련 : 권력형 성추행 피해자의 입장 - 서울시장 보선을 앞두고 왜 보선을 치루게 되었는지에 대한 여당의 각성을 촉구한 입장은 전혀 고려치 않고 철저하게 여당과 가해자 측 시각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피해자를 일방 비판한 내용으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우려되는 등 형평성 없는 방송이었다.

- 서양신 코너(출연자: 서기호·양지열·신장식 변호사) 에서 다룬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관련 내용은 노무현 정부에서 개발지구 지정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이 팩트이거나, 법원의 판결도 없고 여야 공방 중인 사안에 대해 유죄 확정이라고 단정했다. 이날 방송은 야당 시장후보들의 비리 의혹에 대하여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서울시 문건이 나온다면’, ‘김 모 교수가 예전부터 입시비리 의혹을 주위에 얘기했다면’, ‘엘시티 차명분양권 거래 내막이 있다면’ 등, 야당(국민의힘) 후보들에게 모두 가정을 전제로 유죄가 될 수 있다는 식의 일방적 토론을 장시간 방송하고, 이에 대한 반론 인터뷰는 일체 없었다.

○ 관련 선거방송 심의 규정 :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방송법 제33조에 따른, 공정성, 공공성 문제- 방송은 사실보도를 유지하며, 선거방송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하는 등으로 왜곡하여 보도해서는 안 된다./방송은 선거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형평성, 객관성을 유지하고 후보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3. ‘부동산 의혹’ 야당은 부풀리기 여당은 덮기 (2021.3.19. 07:05-08:55)

1) 방송내용

▶ 뉴스브리핑에서 진행자 김어준은 “2015년 최초 청약일로부터 박형준 가족은 2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특혜는 시장에 아예 나오지 않았던 진짜 로열 10개가 있는데, 그 중 2개가 B동 17층 18층 3호 라인이에요”, “박형준 가족에게 2채를 넘긴 사람들, 너는 누구냐? 제가 보기에 그 두 사람은 수사대상이 될 것 같아요” 등

2) 팩크체크 플러스

- 객관적 근거 없이 박형준 후보가 특혜분양에 연관됐다, 또 아파트를 판매한 사람까지 싸잡아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는 등 의혹제기와 주관적 주장을 펼쳤다. 특히 오세훈·박형준 후보에 대해서는 5분 20초간 의혹을 제기성 발언을 하고, 박영선 후보의 도쿄 아파트에 대해서는 “장관 청문회 때도 나온 얘기”라며 30여 초만 다루며 지나갔다.

3) 선거방송심의규정 제5조(공정성)제1항 및 제2항, 제8조(객관성)제1항, 제10조(시사정보 프로그램)제2항 위반

4.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3.15~19) 모니터 총평

○ 최근 TBS(교통방송)-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보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여권의 초조함이 읽힌다.

○ 진행자 김어준 씨는 해설·논평을 빙자한 정치 선동으로 연일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의혹을 부풀리고, 전문가 인터뷰조차 여권 측 인사들만 집중 섭외해 두 후보자를 비난하는 극단적 편파방송을 자행하고 있다.

○ 이번 주(3.15~19)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분석한 결과, 김어준 씨가 국민의힘 오세훈·박형준 후보에 대해 의혹 제기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고, 같은 내용의 일방적 인터뷰 역시 5회나 편성한 반면, 반론은 일체 방송하지 않았다.

○ 일주일 중 선거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위반한 내용은 단 1회의 브리핑 자료에 모두 담을 수 없을 정도여서, 그 중 심각한 내용들 위주로 살펴보면,

- 먼저 김어준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오거돈 일가 가덕도 인근 8만평 보유’ 건에 대해 “50년 전 매입한 땅이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옹호하면서도(3.15), ▲바로 다음날에는 역시 50년 전 처가에서 상속받은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은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며(3.16), 이틀 사이에 듣는 청취자마저 민망할 정도의 철저한 이중 잣대를 보였다.

- 김어준은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 토지보상 역사상 돈을 번 건 딱 2건밖에 없다. 하나는 4대강, 하나는 내곡동” 등, 정체불명의 전문가 의견을 내세워 오세훈 후보에 대한 의혹을 부풀렸고(3.19), ▲84층 중 비교적 저층에 위치한 박형준 후보의 아파트를 연일 “로열층”이라고 강조하며, 마치 박 후보가 특혜 분양에 직접 연관된 것처럼 음모론까지 제기했으며(3.18~19), ▲반면 국민의힘이 제기한 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도쿄 아파트에 대해서는 “장관 청문회 때도 나온 얘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

음.

-많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서도 “민주당 찍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라며 “이제 그걸 비판한다고 해서 2차 가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등, 여권 지지자들에게 사실상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선동하는 만행 수준의 발언까지 내뱉었고(3.18),

- 심지어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안철수 후보와의 양자 가상대결에서 모두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에스티아이)를 가리켜, “들여다보면 샘플에 문제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바이어스가 걸린다고 하죠” 등, 그야말로 선동가의 눈에는 모든 것이 선동·조작으로만 보임을 여실히 보여줬다(3.15).

○ 해당 기간에 편성된 전문가 인터뷰 중 여야 정치인들의 ‘양자 토론’을 제외하면, 여권과 진보 인사들만 9명이나 출연해 국민의힘 후보들을 한 목소리로 비난하거나 허위사실을 쏟아냈으며, (* 출연자 내역 : 서기호·양지열·신장식 변호사(이상 3.15), 김한규 민주당 법률대변인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이상 3.17), 서기호·양지열·신장식 변호사(이상 3.18), 윤준병 민주당 의원(3.19)

- 그중에는 “(서기호)허위사실공표죄가 명백히 입증됐습니다”, “(서기호)확실하게 유죄가 인정”, “(신장식)거짓말이죠” 등, 이른바 법률가라는 사람들이 사법적 판단에 앞서 스스로 단죄하는 오만의 극치를 보였고, 진행자 김어준 씨는 이들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고 오히려 더욱 부추겼다.

○ 현재 국민의힘 후보 캠프는 공정한 토론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어준 씨는 “국민의힘은 출연을 거부했습니다”라는 말로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방송하고 있다. 공영방송이라면 보궐선거 시기에는 출연하지 않는 측의 견해를 대변할 인사들이라도 섭외해 최소한의 균형·형평을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V. 대담한 공영 라디오의 여당 편들기, 불공정과 선동방송

1. 미디어의 구조화된 불공정 보도

○ 이번 보궐선거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이 원인을 제공하여 800억원 이상의 혈세를 들여 치러지는 선거이다. 많은 미디어에 의해 이러한 본질적인 이슈에 대한 내용은 간과되고 ①박원순 시장의 성비리를 은폐시키고 피해자 주장을 왜곡시키는 보도가 이슈가 되기도 하고, ②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성비리 사건의 경

우 후보자를 내지 않기로 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사태에 대한 비판이 부족하다. 반면 오세훈·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잡음과 같은 비본질적인 이슈에 치중함으로써 본질을 흐리고 있다.

○ 여기에 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사태는 범죄행위로 보아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미디어는 이러한 국민적 관심사보다 ①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②박형준 후보의 LCT 의혹을 증폭시키는 데 열중하고 있다. 이는 LH 부동산 투기사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소위 ‘물타기 프레임’을 교묘하게 돕는다는 의혹을 받을 만하다.

○ 불공정한 선거보도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 방송 공정성에 대해 ‘기계적 균형’이라도 갖추는 것이 요구된다. 우리 방송의 공정성 제도화는 시급한 과제이다.

○ 공영 라디오가 보궐선거에 대한 여당 편들기가 대담하고, 불정정이 일상화되어 있다. KBS 1라디오 주진우, TBS 김어준 진행자의 불공정 선동방송 행태가 두드러졌다. 주진우와 김어준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KBS와 TBS 프로그램을 진행을 계속할 수 있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방송법은 공정성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정성의 제도화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유지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방송을 계속한다면 공영라디오는 ‘정권의 나팔수’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이다.

2.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선동방송

▶ 김경진 전의원·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언쟁 (3.12/금 17:05-18:55)

http://vertical.kbs.co.kr/popup.html?source=episode&snamename=vod&stype=vod&program_code=R2020-0137&program_id=PS-2021035366-01-000&broadcast_complete_yn=N&local_station_code=00§ion_code=99

○ <초지일검> 코너에서 검사출신 김경진 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의 급부상과 LH 부동산 투기사태 수사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 LH 수사와 관련해 박영선 후보의 특검 주장과 검찰수사 후 특검을 생각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을 살펴본 다음, 특검에 공감하는 김 의원 입장과 시행령 개정이 가능하지만 현재의 법령을 따라야 한다는 김 전 의원의 입장이 대비를 이루었다.

- 검찰개혁과 조국의 부인 정경심의 표창장 위조사건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던 중 김경진은 검찰수사가 부당했으면 실형 4년이 왜 나오냐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 그러자 김남국은 검찰이 국민을 속였다면서 공소장 변경 등의 문제를 지적한다. 김경진이 공소장 변경에도 징역 4년이 나온 것은 법원이 어쨌든 범죄행위를 인정한 것이라고 하자 김남국은 그의 화법에서 흔히 보이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한다.

“그럼 이 사람이 징역 살면 그게 제대로 됐다라는 겁니까? 유죄가 나오면 그게 무조건 잘 된 수사이고, 그게 잘 한 검찰이라고 말할 수 있나라고요?”

- 지금 김남국은 법원이 실형을 선고해도 검찰의 수사는 부정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만약 검찰이 부당한 방법으로 수사를 했다면 법원이 정경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김남국은 지금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를 부정하고 있는 셈이 된다.

○ 김남국의 황당한 억지 주장은 또 있다. 김남국은 부산 엘씨티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해 “과거에 검찰이 수사지휘 했을 때는 고위직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면서 원하는 수사만 했어요. 윤석열 총장이 뺨 맞아가면서 수사했다는데 뺨 맞아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선택적 수사를 했던거죠.”라고 주장한다.

- 또 엘씨티 분양과 관련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명단에 있는 사람들 당시 국회의원, 지금 현직 국회의원도 포함돼있다 하구요. 검사장 고위직 구두룩뻑적 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수사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라면서 검찰이 의도적으로 엘씨티 관련 혐의를 모른척하고 수사를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단정한다.

- 김경진이 그렇게 단정을 하려면 구체적인 사실이 드러나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그에 대한 김남국의 답변은 MBC나 JTBC가 방송을 했다는 것이 확실한 근거라고 말한다.

- 그런데 MBC나 JTBC의 보도는 거꾸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을 의혹 차원에서 보도하는 것일 뿐, 사실상 엘씨티 특혜 분양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실체적 진실이 드러난 것이 없다는 점이다.

- 만에 하나 검찰이 일부러 잘나가는 고위급들을 봐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검찰의 능력이 부족해 기소를 못했을 수도 있고, 또 기존의 처분대로 미분양이었기 때문에 특혜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어쨌든 현 시점에서는 실체적 진실이 드러난 것이 없는데도 김남국은 의혹뿐인 방송의 보도를 근거로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하고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고 원하는 수사만 했다”고 결론을 내린다.

○ 결국 생방송 중 두 출연자가 감정적인 언사로 공방을 이어갔고, 김경진은 앞으로

출연을 그만두겠다는데 김남국은 상대를 재차 비난했다. 마무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진행자는 두 출연자가 감정적인 언사로 토론이 격양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주진우 라이브>는 “자중자애 겸손감있게”라는 진행 캐치프레이즈처럼 ‘겸손감있게’ 선동방송을 하고 있다. 이날 김남국 의원의 독단적인 발언은 공영방송의 품위에 관해 심각한 질문을 던졌다(2021.3.16. KBS노조 성명 “저질 선동꾼 비판받는 출연자 김남국을 퇴출하라” 참조).

3. 공영라디오의 정파성은 ‘정권 나팔수’ 오명

○ 뉴스의 해설이나 이슈의 토론과 관련해 출연하는 출연자들이 모두 정권과 깊은 관계가 있거나, 진보좌파의 활동가들 아니면 진보좌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미디어에 소속된 인물들로 채워져 있다. 또한 국회의원의 출연 빈도도 여당진영 국회의원 출연 빈도가 높다.

○ KBS 라디오의 <주진우 라이브>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를 비롯한 많은 보도 시사 프로그램에서 자행되는 정권 편파적 발언, 부적절한 편향 사례는 상당하다. 토론 형식의 일부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정권의 입장을 충실하게 대변하는 출연자들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그 자체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 주진우 씨는 이미 2020년 10월 29일 <주진우 라이브>에서 대법원 판결로 17년 형이 확정된 前 대통령 이명박에게 저주를 퍼붓는 모욕과 빈정거리는 언사들이 여과 없이 방송하는 등 공영방송 진행자로서의 자질에 대해 여러 차례 비판받은 바 있다(2020.11.02. KBS공영노조 성명 “주진우...김경래... 왜 검언유착 오보 참사가 <走狗 저널리즘>일 수밖에 없는가?” 참조).

▶ 주진우, 라디오서 MB 조롱...KBS 노조 “공영방송 품위가 쓰레기통에”(조선일보 2020.11.2)

https://www.chosun.com/culture-life/culture_general/2020/11/02/KXPB4MJ27FCB5AUCAYVHTMKUVQ/?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TV조선> 서주민 기자는 김어준을 언론인으로 자칭하며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는 이유에서 “김어준이 최순실보다 나쁜 ‘언론 공작 정치인’이다”라고 보도했다. 합법적 권한을 부여받지 않고도 비선실세 행세를 한 최순실 씨와 비교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3.21).

▶ [뉴스야?!] 김어준이 최순실보다 나쁘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21/2021032190070.html

○ 공영 라디오 일부 프로그램을 팩트체크한 결과 보궐선거에 대한 여당 편들기가 대담하고, 불공정이 넘치고, 선동방송 행태가 상당 수 확인되었다. 불공정한 보궐선거 보도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 지금이라도 공영방송의 본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영라디오는 정권의 나팔수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이다.

Ⅵ. 이념과 코드를 배격한 SBS <8뉴스>

1. 정보 중심의 보도

▶ 흔들리는 중도 · 40대...야권 후보로 쏠림 현상 (3.15)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42879&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plink=COPYPASTE&cooper=SBSNEWSSEND

○ "야권 후보 단일화를 놓고 양쪽의 살아싸움이 길어지는 것은, 핵심 투표층인 40대와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 사이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여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세현 기자가 그 표심을 분석해봤습니다. 지난 5일과 13일, 양자 가상대결을 전제로 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도 조사 결과, 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맞붙는 경우 박 후보는 3.3%포인트 떨어졌고, 오 후보는 5.7%포인트 올랐습니다.

선거 판세를 결정한다고 해서 스윙보터, 즉 부동층이 많은 중도 성향만 떼어놓고 보면 박 후보는 7.4%포인트 하락, 오 후보는 14.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여권 선호도가 높은 40대에서도 오 후보 지지율이 14.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야권 후보를 향한 '표심의 이동 현상',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먼저 지지도. 박 후보는 5.5%포인트 떨어진 반면, 안 후보는 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중도 성향 응답만 보면 박 후보는 9.3%포인트 하락, 안 후보는 8.7%포인트 올랐습니다. 40대에서는 박 후보는 10%포인트 빠지고 안 후보는 14.9%포인트 뛰었습니다."

○ 팩트체크 플러스 : SBS <뉴스8>은 정보 방송에 충실했다. 이념과 코드는 희석된 상태였다. 성역은 거의 찾을 수가 없었고, 프레임도 색깔이 선명치 않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뉴스 내용이 KBS와 여타의 내용과 다른 것이 별로 없었다. 전체 지상파 방송이 대체적으로 정부의 통제 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2. 야권 단일화 과정 연속성 이어간 무리 없는 보도

○ 관련 기사 11건

▶ '양보 경쟁' 끝에 규칙 합의...민주당 "정치 희화화" (3.20)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49327&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plink=COPYPASTE&cooper=SBSNEWSSEND

○ “오세훈·안철수, 두 야권 서울시장 후보들이 양보 경쟁까지 벌인 끝에 일단 단일화 규칙에 합의했습니다. 언제 여론조사를 시작할지는 내일(21일) 정하기로 했는데요. 민주당은 이를 두고 '정치 희화화'라고 깎아내렸습니다.

▶ 오전엔 신경전, 오후엔 양보...오-안, 담판만 남았다 (3.19)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48648&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plink=COPYPASTE&cooper=SBSNEWSSEND

○ “안 후보가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2차 양보 선언을 했는데 비슷한 시간 오 후보도 안 후보가 애초에 요구해온 무선전화 100% 안을 받아들일겠다고 양보했습니다. 유선 10% 포함 여론조사를 고수하던 오 후보가 무선 100%를, 무선 100%를 요구하던 안 후보가 유선 10%를 수용하겠다고며 거꾸로 맞선 겁니다.”

▶ 배후엔 김종인?...상왕론에 사퇴요구까지 (3.18)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47479&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plink=COPYPASTE&cooper=SBSNEWSSEND

○ "이런 안 후보에 오늘은 김 위원장이 당을 좌지우지한다며 비판해온 국민의힘 원로들까지 비난에 합세했습니다.[이재오/전 의원 : 후보 단일화에 걸림돌이 되어온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실제로 김 위원장과 안 후보는 과거에도 악연에 가까웠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해 9월) : 도대체 이 양반이 정치를 제대로 아느냐 하는 생각을 내가 했기 때문에...][안철수/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 (2016년 3월) : 낯은 리더가 권력을 잡으면 회유, 협박, 그리고 비난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협상 파트너인 안 후보를 김 위원장이 박하게 대하는 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야권 단일화 먹구름...각자 후보 등록 · 추가 협상 (3.18)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47478&plink=THUMB
&cooper=SBSNEWSPROGRAM&plink=COPYPASTE&cooper=SBSNEWSSEND](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47478&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plink=COPYPASTE&cooper=SBSNEWSSEND)

○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 (안 후보가 수정제안을 수용하면서) 아마 본인의 결단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사실 당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오늘 공개 활동이 없었던 안철수 후보는 "오 후보와 국민의힘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모습으로 나서 달라"고 반박했습니다.

▶야권 단일화 먹구름...각자 후보 등록 · 추가 협상 (3.18)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47478&plink=THUMB
&cooper=SBSNEWSPROGRAM&plink=COPYPASTE&cooper=SBSNEWSSEND](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47478&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plink=COPYPASTE&cooper=SBSNEWSSEND)

[박영선/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의료 메디컬 특구로 지정하고 몽골하고 같이 연결해서 몽골에서 스타트업, 텀키베이스로 투자할 수 있게...]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피해자에게 잘못된 생각으로 고통을 준 점을 사과한다며 박 후보 캠프 대변인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내곡동 땅' 쟁점 부상... "셀프 보상" vs "국장 전결" (3.18)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47480&plink=THUMB
&cooper=SBSNEWSPROGRAM&plink=COPYPASTE&cooper=SBSNEWSSEND](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47480&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plink=COPYPASTE&cooper=SBSNEWSSEND)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정 제안서에) 경유자로 서울시장 오세훈이라고 특정하게 명기돼 있는데, 그것을 보고도 하지 않고 국토부에 제출한다, 이것은 서울시 출신의 공무원이라면 상상하지 못할 일입니다.] 오 후보는 서울시 주택국장 전결사항이라 전혀 몰랐다고 반박했습니다.

SBS 취재진이 김효수 당시 주택국장과 통화했는데 "자신이 전결 한 게 맞다"며 "오 후보 측 땅이 포함됐는지는 이번에 알았고, 오 후보는 당시 제안을 알 수 없었을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제안서 결재란에 등장하는 김 국장 이하 직원들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단독] "박형준 부인 아파트 전 주인은 아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47487&plink=THUMB
&cooper=SBSNEWSPROGRAM&plink=COPYPASTE&cooper=SBSNEWSSEND](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47487&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plink=COPYPASTE&cooper=SBSNEWSSEND)

박형준 후보는 부인 명의 LCT 아파트에 대한 특혜분양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 [박형준/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지난 15일) : 제가 살고 있는 엘시티 아파트는 특별분양 비리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2020년 4월에 정상적인 매매를 거쳐 샀습니다.]

부인이 정상적인 매매를 통해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설명했지만 누구로부터 집을 샀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SBS가 입수한 해당 아파트의 매매 계약서입니다.

지난해 4월 10일 부인 조 씨가 최 모 씨에게 웃돈 1억 원을 주고 구입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81년생 최 모 씨, 다름 아닌 조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조 씨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 최 씨는 지난 2015년 10월 28일 최초 청약이 있던 날, 분양권을 갖고 있던 이 모 씨에게 20억 2천200만 원을 주고 집을 샀습니다.

웃돈은 7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조 씨의 딸 최 모 씨도 엄마 아파트 바로 아래층을 최초 분양자로부터 웃돈 500만 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LCT 아파트 두 채가 같은 날 조 씨의 아들과 딸 명의로 된 겁니다.

이들에게 500~700만 원 웃돈만 받고 아파트를 넘긴 최초 분양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권 단일후보 박영선…민주당, '내곡동 땅' 고발 (3.17)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45836&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plink=COPYPASTE&cooper=SBSNEWSSEND

○ "박영선/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오세훈 후보, 진실을 말하지 않는 자, MB와 똑 닮았다. 안철수 후보, 행정 경험 없어서 핵심을 짚지 못한다.] 민주당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땅 보상 의혹'과 관련해 개발을 결정한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데도 노무현 정부라고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오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야권 단일화 협상진통…여권 공격에 한 목소리 (3.17)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45835&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plink=COPYPASTE&cooper=SBSNEWSSEND

○ “[안철수/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 :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는 겁니다.]오 후보는 서울시장 시절 내곡동 가족 땅을 보상받은 문제를 놓고 여권과 충돌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닮았다"고 공격하자, 오 후보는 박 후보를 나치 선동가 괴벨스에 빗대 반격했습니다.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 흑색선전은 한마디만 하면 된다. (박영선 후보) 그 말을 듣고 꼭 '괴벨스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오세훈 후보 측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박영선 후보 측 인사들을 고발했습니다.“

▶ '내곡동 땅' 토론회 격론... '국민의힘 합당' 승부수? (3.16)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44561&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plink=COPYPASTE&cooper=SBSNEWSSEND

○ 안철수/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 : 땅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께서 분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명이 없다면 야권 선거에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아서...]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 부당한 압력을 가했던 것을 경험한 서울시 직원이나 SH공사 직원은 바로 양심선언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바로 후보 사퇴하겠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 : 36억 원 번 것은 사실이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상실감이 크실 것이...]

▶ "야권 분열의 중심" vs "3자 구도 밀자락 까나" (3.15)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42878&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plink=COPYPASTE&cooper=SBSNEWSSEND

○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직설화법으로 거들었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토론도 할 수 없는 사람이 가서 시장 노릇은 어떻게 할 거예요?]안 후보 발언도 격해졌습니다.

"자신은 토론을 피한 적 없는데 어디서 엉뚱한 소리를 듣고 엉뚱한 말씀을 하시느냐"고 맞받았고, 오 후보에게는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며 "단일화에 진정성이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 : 요즘 LH 사태 덕분에 지지율이 좀 올라간다 싶으니까 3자 구도로 가겠다는 밀자락을 까는 겁니까. 두 후보는 오후에는 비전발표회에서 표정을 풀고 악수했지만, 내내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비슷한 시각 국회에서는 사흘 만에 마주 앉은 실무협상단이 내일 오후 80분 동안 TV 토론회를 여는 데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여론조사 문항은 또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범야권의 신경전이 거세지는 사이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찾아 표심에 호소했습니다.[박영선/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아동보호전문기관도 대폭 확충을 하겠다. 제2의 정인이, 제3의 구미 아동 사건, 이런 것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박 후보와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는 오늘 2차 토론 대결을 펼쳤는데, 내일부터 이틀간 여론조사를 거쳐서 모레 최종 단일후보를 확정합니다."

3. ‘돈 뿌리기’ 관련선거 의혹 지적 않은 <8시뉴스>

▶박영선 "서울시민 1인당 10만 원 위로금 지급" (3.19).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48649&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plink=COPYPASTE&cooper=SBSNEWSSEND

○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일주일 이상 고민했다"며 내놓은 건, 서울시민 전원에게 10만 원씩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공약입니다.

[박영선/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서울시장 1호 결재로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블록체인 기반의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되는….]

블록체인 기반이라 위로금을 어디에 쓰는지 분석할 수 있고 경제 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예산은 약 1조 원이 필요한데, 서울시에 1조 3,153억 원의 여유 재원이 있어 가능하다고 박 후보는 설명했습니다.”

○ 팩트 체크 플라스 : 박 후보의 10만원 대표행위가 관련선거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았다.

○ 관련규정 : 선거심의규정. 제33조. 방송은 사실보도를 유지하며, 선거방송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하는 등으로 왜곡하여 보도해서는 안된다. 끝.